

목포시의회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보류 놓고 갈등

목포지역 애4당 기자회견 "무책임한 결정...심사 재개" 촉구
상임위 "폐기 아닌 보류...위치·비용 등 세심하게 추진해야"

'이동노동자의 쉼터 지원 조례'가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낭비 없이 세심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소속 최현주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를 심사 보류했다.

이번 조례는 길 위의 노동자로 대다수가 특수고용 형태인 배달라이더와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음용수·휴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수요조사 부재와 쉼터 위치,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목포지역 애4당은 지난 2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노동자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실질적 쉼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정책 검토가 아닌 정치적 회피를 했다"고 강조했다.

배달라이더협회가 제안한 5곳 중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하당을 1차 장소로 선정하고,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 및 공공일자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목포시는 이미 임시쉼터를 운영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의회만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은 하려 하고, 의회는 막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보류는 폐기가 아니다"면서 보완 등을 거쳐 재상정되면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은 "목포시에서 이동근로자를 위한 간이쉼터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음 회기에 재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례안은 부결된 게 아니라 조건부 보류"라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이용률이 적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어 세심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조례안 보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목포지역 애4당이 지난 2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 심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진도군 40억 투입 관매도 해역에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진도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꽃게 자원 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조도면 관매도 해역에 꽃게 산란지와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2024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으

며, 올해 11월 공모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진도군 꽃게는 전남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전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불철 꽃게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동안 총 9번의 꽃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진도를 대표하는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도군은 꽃게 방류, 산란과 서식장 정화 사업 등을 통해 꽃게 자원 회복에 힘써왔으나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꽃게 자원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진도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꽃게의 산란, 서식 환경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지역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은 서남해안의 꽃게 자원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진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게의 고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 국제철새 심포지엄... '생태 보전·신재생에너지 상생' 모색

해상풍력·생태 보전 균형 과제 논의

생태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상생을 모색하는 제14회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이 프랑스, 대만 등 해외 연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안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철새 서식지 보전과 상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리방안(부제: 자연과 기술의 공존)'을 주제로 진행됐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 핵심 거점인 신안군이 해상풍력 개발과 생태 보전 간의 균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국내외 사업자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1부에서는 김영남 박사(해양환경공단), 충광홍 박사(국립대만대학교), 이후승 박사(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철새 모니터링, 해양보호구역 관리, 대만 해협 해상풍력 발전소의 바다 새 다양성 영향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장 밥티스트 티보 박사(일본 혼카이도 대학교), 방기창 박사(전남대학교 무인도 서식연구센터), 양승빈 박사(주식회사 리프 대표)가 일본 철새의 해상 이동과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한 우려, 신안군의 조류 서식 현황과 생태관광, 연안 에너지 개발과 조류 생태계 시공간 변화 연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에서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참가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구 등 사례를 공유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철새심포지엄 개최 등 국내외 연구기관, 해상풍력 발전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철새 모니터링, 서식지 복원,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이 EAAF 핵심 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바닷새 보전과 해양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한전에 송전선로 건설 일방 추진 반대 의견 전달

"지역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 필요"

영암군이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 입장을 한전에 전달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전력계통 부시장과 면담 시간을 갖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영암군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전남 6개 시·군을 경유하는 대형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영암군은 영암읍과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등 4개 읍·면 15개 법정리가 예정 구간에 포함돼 있다.

영암군은 올해 9월 '국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영암군민과 협의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건설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충분한 설명과 대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의 건강과 재산,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한전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지역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송전철탑 방식을 지양하고 고속도로나 국도를 활용한 지중화 방식 전환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맛풀무안몰' 개장 19개월 만에 매출 20억 돌파

전국적으로 고른 판매 실적

무안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풀무안몰'이 개장 1년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4월 개장 1주년을 앞두고 누적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두 배 성장을 이뤄냈다. 무안군은 짧은 기간 지속적인 판매 확

대와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주요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쌀이 9억 87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49.3%)을 차지했다. 이어 양파 4억 6600만 원(23.3%), 김·장어 등 수산물 1억 7800만 원(8.9%), 가공식품 순으로 집계됐다.

맛풀무안몰은 개장 이후 누적 배송 횟수 6만

보이고 있다.

지역별 배송 비중은 경기도가 27.08%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 20.99%, 전남도 9.05%, 인천광역시 6.11%, 광주시 4.68%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문 비중은 무안군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산지 직송에 대한 신뢰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결과로 평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풀무안몰이 개장 1년여 만에 누적 매출 20억 원을 달성한 것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고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영암 캘리그래피 전국 공모전 수상작 선정

최우수상에 남궁선 씨

인문이 살아있는 도시 영암' 문구를 배치하고 '영암군민의 노래' 가사를 써 넣은 작품을 출품했다.

우수상은 경남 양산시 박혜경 씨와 서울 강서구 강진호 씨, 장려상은 전남 목포시 전애숙 씨와 광주 서구 나승순·김상임 씨가 각각 수상했다. 입선에는 9명이 이름을 옮겼다.

수상작은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활용·전시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정체성을 알리는 뜻 깊은 공모전이었다"라며 "점가 작품들이 보여준 다양한 인문 시선을 군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들과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이달 검침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1t당 830원·하수도 290원

영광군이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지속적인 생활원가 상승으로 누적되는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계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금 인상분은 올해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내년 1월 고지서에 반영한다.

상수도(가정용) 요금은 ㎥(1t)당 기존 730원에서 100원 오른 830원, 하수도(가정용) 요금은 기존 240원에서 50원 오른 290원으로 책

정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수도요금은 2030년까지 매 격년 14%, 하수도요금은 2031년까지 매 격년 19%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정적자 해소뿐 아니라 취수원 추가 개보수, 공공하수도 확충 등 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군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기본형 직불금 601억 지급...전국 최대

해남군은 올해 1만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농직불금은 ▲5000m²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m²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136~21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제체 등록농가와 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검증 및 대량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세밀굴

"질서유지·인권보장 신뢰받는 교정행정 실천"

장귀남 목포교도소장

"엄정한 질서 유지와 인권 보장, 행복한 직장문화 실현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